

여론을 통해 본 한미FTA

국회비준 시기 신중론의 급부상

정원철

EAI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2011. 8. 3



여론을 통해 본 한미FTA : 국회비준 시기 신중론의 급부상

정원철_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2011. 8. 3

1. 한미FTA 8월 임시국회 비준과 여론

8월 비준 찬성한다 25.8%,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 46.3%, 비준 자체에 반대한다 9.4%
비준 시점, 미 의회보다 먼저 26.2%에 불과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되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최소한 상임위 통과까지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2 방안(부록 1 참고)’을 제시하며 한미FTA 협정내용에 대한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10+2 방안 중 하나라도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8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2006년 6월 시작하여 2011년 2월 마무리되었던 한국과 미국 간 FTA 합의문서의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가협상 결과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우리 측의 양보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부록 2 참고).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미FTA 체결의 효과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바와 달리 그간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점차 우리 측의 양보만 늘어난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만과 불신 때문이다(부록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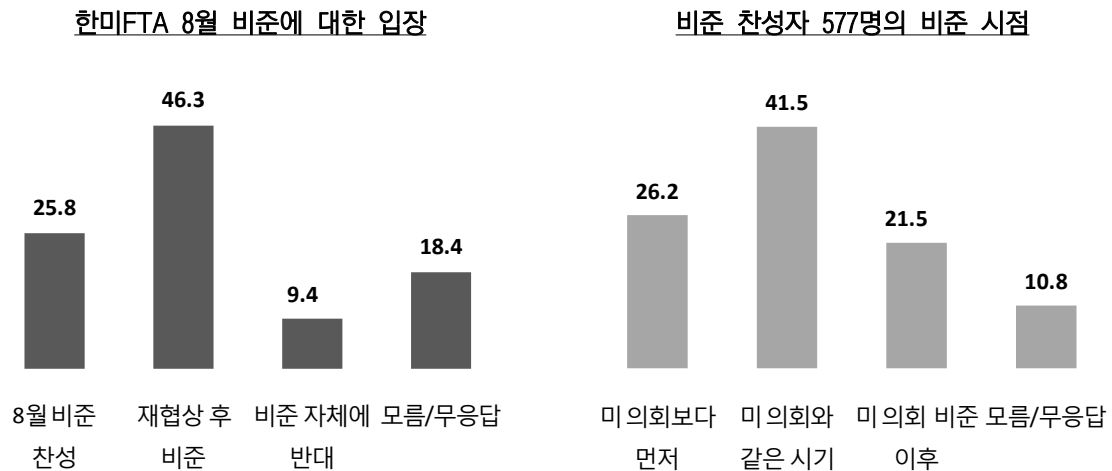
실제 한미FTA 8월 임시국회 비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국민들 중 한미FTA의 8월 임시국회 비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25.8%이다. 반면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46.3%로 나타남으로써 8월 임시국회 비준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보다 20.5% 포인트(P)나 높다. 비준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4%로 한미FTA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소수의견에 그쳤다. 반면 모름/무응답의 응답비율이 18.4%에 달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미FTA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비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즉 8월 비준 찬성과 재협상 후 비준의 응답자 577명(전체 응답자 중 72.1%)이 미국 의회의 비준 시점과 비교하여 답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미 의회와 같은 시기라고 답한 경우들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미 의회 비준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21.5%였다. 미 의회보다 먼저라는 응답비율은 26.2%였다. 모름/무응답은 10.8%였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한미FTA 비준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63.0%는 미 의회보다 먼저 한국 국회가 한미FTA 비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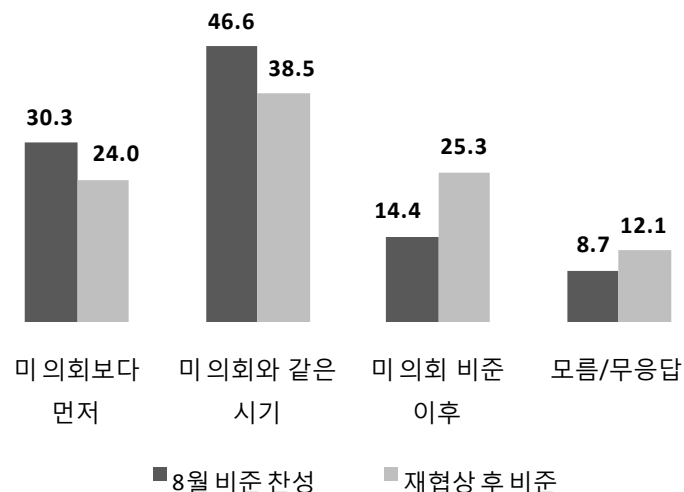


[그림 1] 8월 한미FTA 비준에 대한 태도 및 비준시점에 대한 인식(%)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미국 의회보다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 8월 비준 찬성 입장 중 30.3%만이 미 의회보다 먼저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8월 비준 찬성 입장 중 46.6%는 미 의회와 같은 시기를 그리고 14.4%는 미 의회 비준 이후라고 답했다. 즉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에서조차 미국 의회와 같은 시기 또는 미 의회에서의 비준 이후를 꼽은 경우들이 61.0%라는 의미이다.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들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 의회보다 먼저라는 응답비율은 24.0%, 미 의회와 같은 시기는 38.5% 그리고 미 의회 비준 이후는 25.3%였다.

[그림 2] 8월 비준과 재협상 후 비준 간 비준시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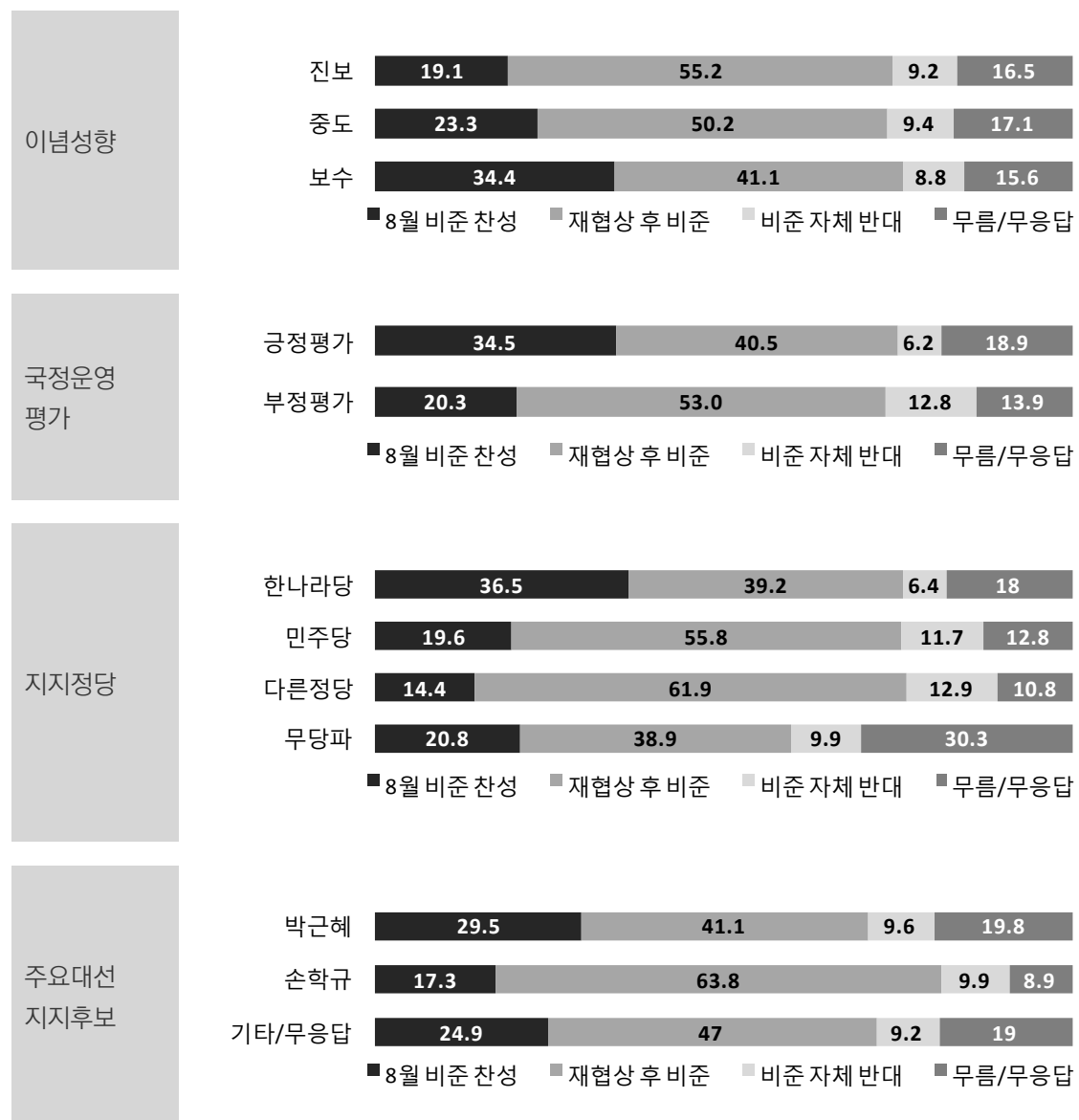


결국 현 상황 본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여론은 재협상을 통해 우리 측에 불리한 협정내용이 없도록 수정/보완하라는 주문이다. 비준 시점에 있어서도 미국 측 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신중론 확산

이념 · 국정운영 평가 · 지지정당 · 차기대선 지지후보별 인식 차이 없어

[그림 3] 정치사회 인식 특성별 한미FTA 비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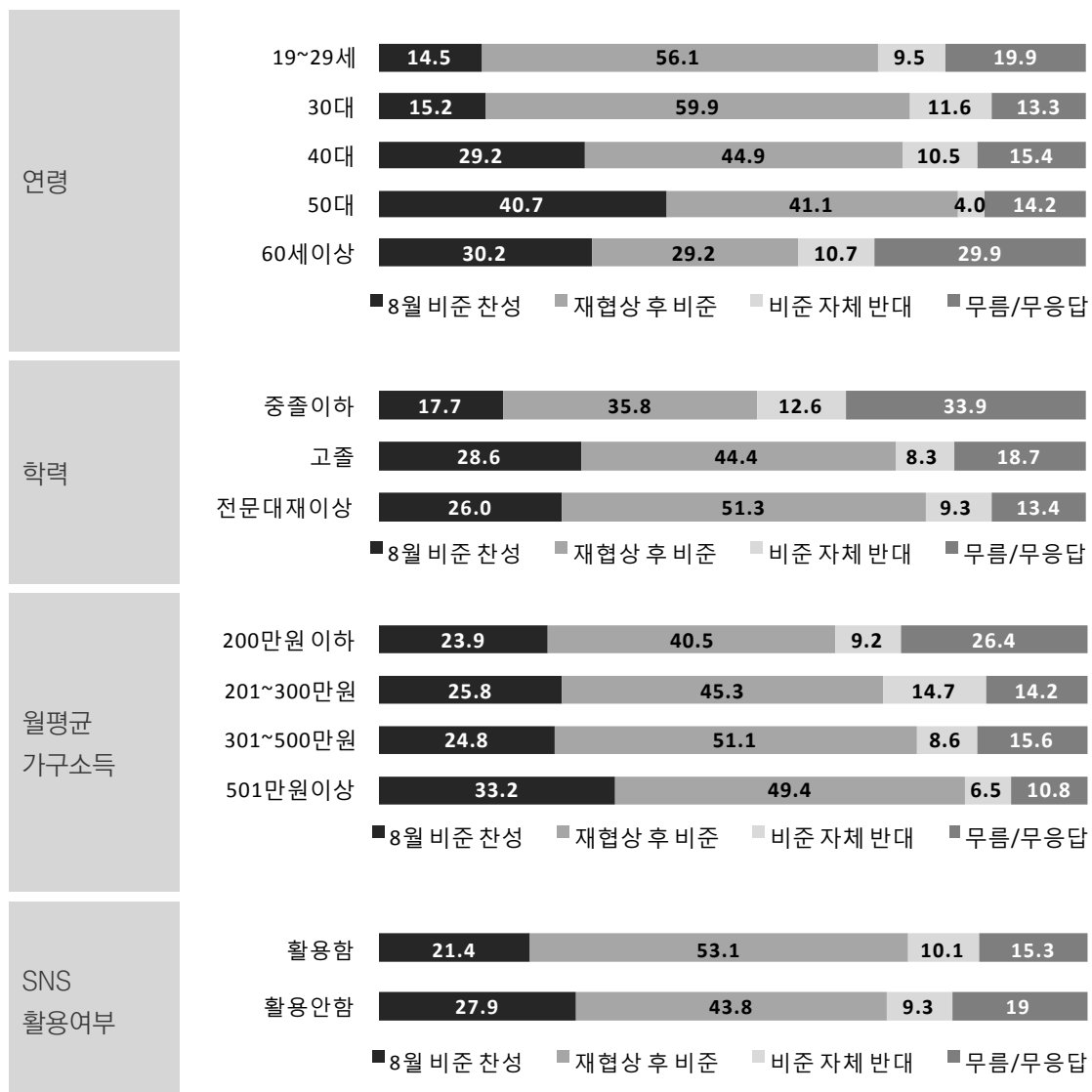
정치사회인식의 배경변수로 널리 사용되는 이념성향, 국정운영평가, 지지정당 그리고 주요 대선 후보 지지별로 봐도 응답패턴이 바뀌진 않았다. 우선 이념성향의 경우 진보에서 8월 비준 찬성의





응답비율이 19.1%로 보수에서의 34.4%보다는 낮았지만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가 41.1%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수에서조차 한미FTA의 8월 비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선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정운영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든 부정적인 평가를 하든 8월 비준 찬성보다는 재협상 후 비준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서든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박근혜 의원 지지자들에게서든 8월 비준보다는 재협상 후 비준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미FTA 비준 인식(%)



연령 · 학력 · 소득 · SNS 활용여부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정치사회적 인식에 따른 비교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연령,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과 한미FTA 비준 인식을 비교하였다. 여기에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여부도 추가하여 분석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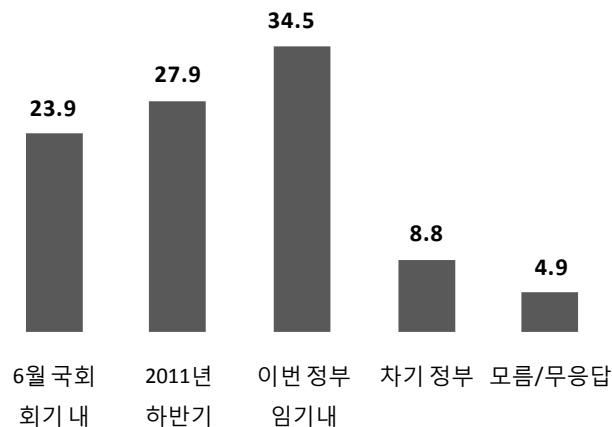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8월 임시국회 비준에 대해 50대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의 40.6%가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60세 이상의 응답비율이 30.2%로 50대 다음으로 높았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20%대 미만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29.2%)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에서만 8월 비준보다 높았을 뿐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40~50%대의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학력의 경우 모든 학력에서 8월 비준 찬성보다는 재협상 후 비준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에서도 8월 비준 찬성이 재협상 후 비준보다 응답비율에 있어 높은 경우는 없었다. SNS 활용여부에서도 활용을 하든 하지 않든 뚜렷한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5월 조사 이후 신중론 확산

회기 내 비준해야 23.9%, 이번 정부 임기 내 34.5% 차기 정부로 미루라 8.8%

국내적으로는 고엽제 파동추가협상에서의 양보, 미국에서의 FTA 비준 지연 등이 이러한 신중론 확산의 이유로 보인다. 사실 고엽제 파동 직후 실시한 5월 조사에서 이미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약화되기 시작했다(EAI 여론브리핑 88호). 2010년 10월 63.8%, 2011년 2월 조사에서 65.8%에 달했던 조속히 비준하라는 여론이 지난 5월 EAI 여론바로미터 조사에서는 57.8%까지 떨어졌다. 또한 5월 조사에서 비준시점과 관련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론의 신중한 입장을 읽을 수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6월 회기 내에 해야 한다는 입장은 23.9%였다. 2011년 하반기라는 의견도 27.9%나 되었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하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34.5%였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기 정부로 미루라는 입장도 8.8%가 있었다.

[그림 3] 한미FTA 비준에 대한 5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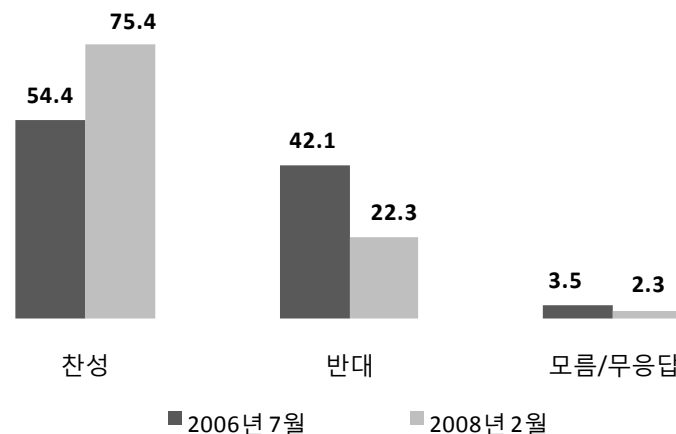


2. 한미FTA를 바라보는 여론의 역사적 변화 추이

노무현 정부 FTA 추진 이래 한미FTA는 대세로 자리잡아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한미FTA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도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9.4%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과거 EAI가 실시한 2006년 7월과 2008년 2월 조사에서 한미FTA 협상을 찬성하는 의견들이 과반수였다. 우선 2006년 7월 서울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된 직후 실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찬성의견이 54.4%로 반대의견 42.1%보다 높았다. 2007년 6월 워싱턴에서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한동안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2008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비율이 75.4%에 달함으로써 반대 응답비율 22.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그림 6] 2006년 2008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인식(%)



* 2006년 7월 조사는 EAI · CCGA 대외인식조사

** 2008년 2월 조사는 EAI · CCGA 동아시아 소프트파워조사

연령 · 소득 · 이념에 따른 분석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2006년과 2008년 조사에서도 이번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사회학적 배경문항이나 정치사회의식 배경문항에 따른 응답비율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달라지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이념성향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든 배경 변수에서 두 해 조사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반대한다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모든 배경 변수에서 2006년보다 2008년에 찬성 응답비율이 증가하였음도 알 수 있다. 실제 2008년 조사결과에서 2006년 조사결과와의 차이를 구해보면 찬성한다는 응답비율이 모두 양(+)의 값을 보이는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은 모두 음(-)의 값을 보였다. 즉 2006년보다 2008년에 한미FTA 협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미





FTA 자체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에서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진작부터, 즉 한미FTA 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된 2006년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2006년 2008년 연령·소득·이념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인식(%)

	찬성			반대		
	2006년 7월(A)	2008년 2월(B)	(B)-(A)	2006년 7월(A)	2008년 2월(B)	(B)-(A)
연령						
20대	51.9	67.1	15.2	43.2	32.0	-11.2
30대	51.5	74.1	22.6	45.6	25.1	-20.5
40대	49.1	77.3	28.2	48.1	22.3	-25.8
50대 이상	62.1	80.1	18.0	34.3	14.5	-19.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8.2	69.1	10.9	41.8	24.0	-17.8
100~199만원	54.5	74.5	20.0	42.6	24.9	-17.7
200~299만원	57.7	74.0	16.3	38.5	24.6	-13.9
300~399만원	51.0	78.8	27.8	46.1	18.2	-27.9
400만원 이상	52.9	75.3	22.4	42.9	23.0	-19.9
이념성향						
진보	51.9	70.0	18.1	45.1	28.9	-16.2
중도	55.4	76.6	21.2	40.4	21.3	-19.1
보수	56.5	77.6	21.1	41.0	19.5	-21.5

*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한미FTA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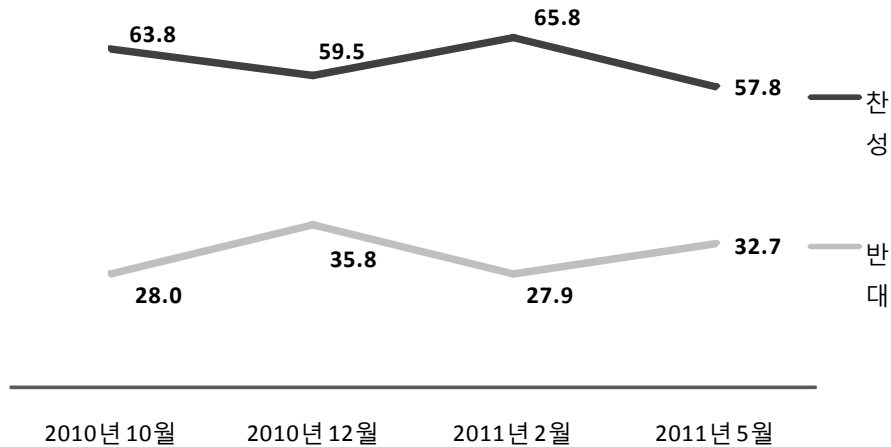
FTA 협정 비준 위해 이익균형 깨뜨리는 양보에 우려

국민들의 한미FTA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2010년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EAI가 2010년과 올해 초에 각각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한미FTA 관련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EAI 여론바로미터 조사결과만을 살펴보더라도 한미FTA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2010년 두 차례 조사의 경우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을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조사에서는 한미FTA의 국회비준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였다. 네 차례 조사결과 모두에서 긍정적인 의견(찬성)이 과반수였다. 반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반대)은 2010년 12월 조사에 35.8%를 나타낸 것을 최고점으로 하여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은 채 20%대에서 30%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미FTA 인식(%)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접근시각은 찬성한다는 입장, 즉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양국간 이익균형이 깨지는 재협상이나 미국의 비준 이전에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신중론 확산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 설전이 아닌 협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록 1〉

7월 22일 기획재정부 발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의 주요 내용

1. 자동차

- 1) 추가협상내용
 - 한·미 양국 모두 발효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한국의 경우, 원협정은 즉시철폐였으나 발효 후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한 후 5년차 완 전 철폐로 변경
 - 미국의 경우, 원협정은 3천cc 이하에 대해서는 즉시철폐를 그리고 3천cc 이상에 대해서는 3년간 균 등 철폐였으나 4년간 유예한 후 5년차에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변경
- 2) 영향 분석 결과
 - 수출은 추가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겠으나 원협정에 비해 대미 수출이 연간 0.55억불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0.02억불 감소하여 대미 흑자가 연간 0.53억불 감소

2. 돼지고기

- 1) 추가협상내용
 - 돼지고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16년 에 완전철폐하기로 합의
 - 원협정은 발효일부터 2014년까지 균등 철폐였으나 2012년부터 계획에 따라 206년까지 철폐하는 것 으로 변경
- 2) 영향 분석 결과
 -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에 비해 관세철폐 스케줄이 2년간 연장됨에 따라 돼지고기(냉동기타) 생산감소 액은 70억원이 줄어든 연간 931억원으로 예상

3. 의약품

- 1) 추가협상내용
 - 원협정은 발효일부터 18개월간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유예였으나 추가협상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3년간 유예
- 2) 영향 분석 결과
 -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손실액이 연간 44억원~97억원 감소

4. 전체 평가

-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 호한 것임
-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 게 큰 기회
-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對미 수출증가 효과 가 나타남
-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연간 5.59억\$)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88억\$ 증가
-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 하면 매우 작은 규모
- 대한상의는 한·미 FTA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





〈부록2〉

2011년 7월 1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

1. 재재협상 내용(10가지)

- 1) 농축산업 주요품목(쇠고기)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 2) 중소기업 보호 장치 확보(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유통법, 상생법)
- 3)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 4)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전성 확보
- 5)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지
- 6)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 7)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 8)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폐기(실질적 무효화)
- 9) 서비스 시장 개방의 negative list 방식(한·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 → 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 (WTO 방식)
- 10) 역진불가(Ratchet) 조항 폐기

2. 국내적 보완 대책(2가지)

- 1) 통상절차법 제정 : 국회에서 통상협상 및 보완대책 수립과정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제정
-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FTA로 피해 보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





〈부록 3〉

한미FTA 주요 진행일지

2006년 2월 : 한미 FTA에 관한 협상개시 선언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도)
2006년 12월 : 한미 FTA 5차 협상 (몬태나)
2007년 1월 : 한미 FTA 6차 협상 (서울)
2007년 2월 : 한미 FTA 7차 협상 (워싱턴)
2007년 3월 : 한미 FTA 8차 협상 (서울)
2007년 4월 : 협상타결
2007년 5월 :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6월: FTA 협정문 서명 (워싱턴)
2008년 4월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2008년 6월 : 한미 통상장관회담(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 합의)
2008년 10월 : 정부, 한미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2009년 4월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2010년 6월 :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한미FTA 새로운 논의 지시
2010년 10월 : 한미 통상장관회의 진행 (샌프란시스코)
2010년 11월 : 한미 정상회담(서울; FTA 쟁점현안 1차 합의 실패)
2010년 12월 : 한미통상장관회의(메릴랜드주 컬럼비아; FTA 쟁점현안 완전 타결 및 합의요지 작성)
2011년 1월 : 한미, 추가협상 결과 조문화 작업 종료
2011년 2월 : 한국 국무회의, 한미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심의·의결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 착수

I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 내용문의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cwc@eai.or.kr)



